



미국 : 공공부문에 부는 대규모 해고 바람, 수습직부터 시작

연방정부 노동자의 규모를 감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1~2년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 수습직 노동자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¹⁾ 이 정리해고는 에너지부, 재향군인부, 교육부, 소비자금융보호국, 중소기업청 등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1년 미만 근무한 연방정부 노동자가 20만 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해고 바람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은 정식 채용 신분이 아니라는 명분하에 해고가 더 쉬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주로 이메일, 화상 통화 등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부노동자연맹(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이번 해고는 업무 수행능력 부족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이

정부는 차세대 공무원을 대량해고함으로써 향후 몇 년 동안 정부기관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버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조치는 신생 부처인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주장해 온 정부지출 삭감의 일환이다. 그는 “많은 기관을 남겨두기보다는 전체 기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²⁾ 그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제외한 정부부처에 대해 해고를 통한 정부지출 삭감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규 고용 역시 정부효율부의 승인을 거치게끔 하는 등 제한적인 상황이다.

1) CNN, “Thousands of Probationary Employees Fired as Trump Administration Directs Agencies to Carry Out Widespread Layoffs”, 2025.2.14.

2) AP News, “Trump Administration Begins Sweeping Layoffs with Probationary Workers, Warns of Larger Cuts to Come”, 2025.2.14.

미국 : 연방정부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법정에서 제동에 걸려

2025년 2월 연방정부 노동자들이 수습직을 위주로 집단해고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재무부, 보건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등 6개의 정부기관에 해고 노동자를 재고용할 것을 명령했다.¹⁾ 윌리엄 알섭 판사는 정부가 업무 수행능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습

노동자들을 해고했지만, 이 해고가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는 이 판결이 연방 기관의 인원 감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합법적인 정리해고는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메릴랜드에서도 제임스 브레다르 판사가



행정부의 대량해고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²⁾ 판결에 따르면 정부는 성과 및 개별적인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기에 사전통보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기록에 의해 개별적인 평가가 없었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 따라 판사가 “불법적”

으로 규정한 강제 인원 감축에 대해 유예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이 명령은 국방부,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인사관리국의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 세 기관에서 강제 감축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 The New York Times, “A Judge Ordered the U.S. to Rehire Thousands of Workers”, 2025.3.13.
- 2) CBS News, “Second Federal Judge Orders Trump Administration to Rehire Fired Probationary Government Workers”, 2025.3.13.

독일 :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수공업계 타격 ... 불법노동 증가 우려

2025년 들어 독일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에 적용되는 사회보험료(Sozialabgabe)가 인상되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¹⁾ 최근 주문량과 매출 감소로 전반적인 사업환경이 눈에 띄게 악화된 수공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수공업중앙연합(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s)의 요르크 디트리히 회장은 사회보험료 인상에 원자재와 에너지, 행정 비용 상승까지 더해져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일반 소비자가 수공업 서비스의 가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스바덴 수공업협회(Handwerkskammer Wiesbaden)의 슈테판 펠 회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불법노동의 압력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공업계의 불법노동 증가를 막기 위해 사회보장료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공업은 제조업과 달리 인건

비 비중이 80%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수공업계는 현재의 인력부족 현상에 더해 수공업이 점점 더 매력 없는 직종이 되어 추후 사업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부족해질 가능성 또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독일 수공업계는 시리아 난민 출신 숙련공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높아 난민의 본국 귀환 시나리오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난민의 향후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부 주도의 본국 송환이 논의된 것은 노동시장에서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에 수공업계는 숙련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일부 정치인이 요구한 조속한 시리아 난민 송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디트리히 회장은 많은 업체가 시리아 난민의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왔으며, 이미 독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난민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

- 1) Tagesschau, “Werden Handwerker bald unbezahlbar?”, 2025.2.9.
- 2) Spiegel, “Deutsches Handwerk will syrische Beschäftigte halten”, 2024.12.27.

독일 : 2024년 성별 임금격차 16%, 결혼 후 소득과 노후소득에서 차이 커

연방통계청은 2024년 독일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6% 낮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격차인 18%보다 2%p 감소한 수치이지만 성별에 따른 소득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 독일 ifo연구소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평균 노동소득이 결혼 이후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부부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자녀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 노동자의 경우 결혼 후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다.¹⁾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전통적인 성 역할과 조세제도의 왜곡된 유인으로 인해 결혼 후 여성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점이 꼽혔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성 역할 의식을 가지고 성장한 동독 출신 여성은 전통적인 성 역할이 선호되던

서독 출신 여성보다 결혼 후 소득 감소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소득세법의 부부 합산과 세(Ehegattensplitting) 제도는 기혼 여성 노동자에게 노동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노후소득에서의 성별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남성의 평균 연간 노후소득은 약 2만 5천 유로였지만, 여성은 1만 5천 유로에 불과했다.²⁾ 여성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시간제 근무로 인해 법정 연금과 기업 연금을 더 적게 수령할 뿐 아니라, 사적 노후 대비 노력 또한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바이에른 주 노동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단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력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 대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했다.³⁾

- 1) Tagesschau, “Im Schnitt um 20 Prozent: In der Ehe sinkt das Einkommen der Frauen”, 2025.3.7.
- 2) Tagesschau, “Private Vorsorge für Frauen wichtig: Warum die Einkommenslücke im Alter wächst”, 2025.3.8.
- 3) Merkur, “Frauen in Bayern haben höhere Bildungsabschlüsse als Männer, verdienen aber weniger”, 2025.3.11. 바이에른 주 노동청에 따르면 뮌헨과 바이에른 주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더 고학력자임에도 여전히 보조직이나 기능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전문가나 고급인력으로 고용되는 경우는 적다고 한다.



영국 : 승차 공유 기사들, 더 나은 처우 요구하며 파업 돌입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영국에서 우버, 볼트, 애디슨 리 등 주요 승차 공유 플랫폼의 기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단행했다. 이날 파업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이어졌으며, 수천 명의 기사들이 참여하여 열악한 임금과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했다.¹⁾

기사들이 파업을 통해 제기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낮은 수입과 불안정한 노동환경이다. 2021년 대법원 판결로 기사들은 휴가 및 병가 수당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요금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기사들의 실질적인 수입은 더욱 감소했으며,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세금, 차량 유지비, 연료비 등을 고려하면 수입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사들은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임금은 더욱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1년에는 런던에서 강도를 목적으로 택시를 예약한 10대들에게 볼트 기사가 살해당하는 사건까

지 발생했었다. 기사들은 승객 신원 확인 시스템 미비, 폭행 피해 기사 지원 부족 등 플랫폼 기업들의 미흡한 안전 관리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이에 대해 승객 신원 확인 시스템 개선, 불만 처리 시스템 개선, 폭행 피해자 지원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은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기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우버는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평균 시급이 30파운드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휴가 수당, 연금, 질병 및 상해 보험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볼트 역시 가격 책정을 통해 기사 수입과 승객 비용의 균형을 찾고 있으며, 모든 기사에게 최저임금과 연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²⁾

1) The Guardians, “‘It’s Hard to Survive’: Why UK Private Hire Drivers Are Striking on Valentine’s Day”, 2025.2.14.

2) BBC, “Uber and Bolt Drivers Strike on Valentine's Day”, 2025.2.14.

영국 : 복지개혁 강행 ... 시민·노동계 강력 반발

영국 정부는 연간 50억 파운드(약 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복지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장애 및 건강 관련 복지수당(PIP)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특정 질환을 가진 수급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¹⁾

정부는 복지 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실업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 평가(WCA) 폐지 및 근로 불능 지원금 삭감을 통해 PIP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나 일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수급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²⁾

이에 대해 시민들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 100만 명이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 및 장애를 가진 노동

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16~64세 인구 중 400만 명(약 10%)이 장애 또는 근로 불능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19년 280만 명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 및 행동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번 개혁이 취약 계층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³⁾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NHS) 서비스 개선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가 복지개혁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과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복지 삭감이 오히려 장애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막고, 실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개혁으로 영국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1) Financial Times, "1mn Fewer People to Secure Health Benefits under UK Welfare Reform", 2025.3.17.
- 2) BBC, "If I Lose My Benefit Payments I'll Struggle to Get to Work", 2025.3.18.
- 3) Unison, "Going after Disabled People and Vulnerable Families Is Not the Way to Get the UK Economy Back on Track", 2025.3.18.



프랑스 : 2024년, 문 연 곳보다 폐쇄된 산업시설 더 많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프랑스 내에 새로 문을 연 산업시설보다 폐쇄 또는 폐쇄 예정인 산업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¹⁾

프랑스 언론 “Ici”가 프랑스 비즈니스 전문 월간지 “L’Usine Nouvelle”와의 협력으로 2월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에 프랑스 내에서 문을 닫거나 또는 닫을 계획을 밝힌 산업시설은 89건에 달했다. 이는 46건의 부지 확장을 포함한 65건의 신규 산업시설보다 20건 이상 많은 수치다.

2025년 들어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1월에만 산업시설 18곳이 폐쇄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새로 문을 연 산업시설은 4곳이고, 시설 확장은 4건으로 모두 합해서 8건에 불과했다. 한 달 사이에만 신규 또는 확장하는 산업시설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곳이 문을 닫거나 향후 닫을 계획을 세운 셈이다. 이와 관련해 “L’Usine Nouvelle”의 편집국장 엠마뉘엘 뒤테이는 “이러한 추세가 2024년 말부터 가속화되었다.”라고 지적했다.

폐쇄 산업시설의 수가 신규 산업시설보다 더 많아지면서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재산업화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부터 엠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까지 프랑스 내 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재산업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24년 들어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새로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산업시설이 더 많아지면서 프랑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산업화 기류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신규 산업시설과 폐쇄 산업시설의 역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임금 및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과 화학, 제약업 등 에너지 비용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데다 글로벌 경쟁 또한 격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타이어 생산업체인 “미슐랭”은 2026년까지 생산시설 두 곳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 역시 프랑스 전역에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화학기업 “아르케마”는 그르노블 남쪽의 생산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Franceinfo, “Industrie : plus de fermetures que d’ouvertures d’usine en France en 2024, la tendance négative se poursuit avec 18 fermetures annoncées en janvier”, 2025.2.12.

프랑스 : 청년 4명 중 1명, 사회 진출 초기부터 직종 변경

프랑스 직업능력조사연구소(Céreq)에서 2025년 3월 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청년 4명 중 1명꼴인 약 24%가 노동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종 변경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번 연구는 2017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세대 약 9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처음으로 인터넷 또는 전화회를 통한 조사가 이뤄졌고 3년이 지난 2023년에 2차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프랑스 직업능력조사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세대는 약 74만 명에 달한다. 2020년 봄과 2023년 가을에 걸쳐 두 차례 진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36%가 직종 변경을 고려했고, 24%가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

직종 변경을 바라는 이유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다른 직종에 대한 매력”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더 많은 노동가치 추구”가 77%, “직업과 개인 생활 간의 균형”과 “노동조건 개선”이 각각 67%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 인상”으로 인한 직종 변경은 58%에 그쳤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직종 변경을 고려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실업에 놓인 경우에는 31%,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된 경우에는 34%가 직종 변경에

나섰다. 전체 청년 세대의 직종 변경 비중이 24%인 것과 비교하면 10%p 가까이 높은 수치다. 실업에 따른 직종 변경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자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경우 직종 변경에 나서는 경우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에 취업한 청년 세대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계약 형태가 직종 변경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전공한 분야와 직종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직종 변경을 고려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가 전공한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약 30%로, 서로 맞는 경우의 15%와 비교해 두 배 높게 조사됐다. 특히 졸업 후 3년 후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직업에 따른 성취감을 못 느끼면서 전공한 분야와 직종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42%가 재취직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종 변경의 긍정적 효과를 보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한 경우 학업을 마치고 6년이 지난 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92%로 나타났다. 반면 직종 변경에 나서지 않았거나 도중에 포기한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각각 82%와 70%로 낮게 조사됐다. 또한 그들 중 95%가 2023년도에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답했는데, 이는 2020년 71%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0%p 이상 높아진 것이다.

1) Cereq(2025), “Réorientations précoces : un jeune sur quatre souhaite changer de métier”,



<https://www.cereq.fr/> (2025.3.17).

일본 : 노동력 인구 사상 최대치 경신 및 여성과 고령층 증가세 뚜렷

일본 총무성이 2025년 1월 31일 발표한 「2024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노동력 인구(15세 이상 중 취업자와 구직자를 합한 수)가 전년 대비 32만 명 증가한 6,957만 명으로, 1953년 통계 시작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¹⁾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향후 2030년에 노동력 인구가 7천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²⁾

노동력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여성과 고령층의 참여 확대가 꼽힌다. 여성 노동력 인구는 3,157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1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력 인구는 946만 명으로, 2000년 대비 약 1.9배 증가해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26.1%가 취업하거나 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 다양한 연령층이 활발히 참여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³⁾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이후 서비스 업종의 회복세도 뚜렷하다. 2024년 12월 기준, 숙박·음식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9만 명 증가한 426만 명을 기록했고, 생활 관련 서비스업·오락업 역시 8만 명이 증가해 235만 명에 달했다. 반면, 운수·우편업은 전월과 동일한 346만 명을 유지했다.⁴⁾ 또한 2024년 12월의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4%로, 전월보다 0.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⁵⁾ 즉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던 구직자 수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이러한 감소를 일부 상쇄하며 노동력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⁶⁾

- 1) 総務省統計局(2024), 「労働力調査(基本集計) 2024年(令和6年)12月分結果」, 総務省統計局.
- 2) 朝日新聞, 「24年の労働力人口、過去最多 7千万人に迫る、高齢者と女性が増加」, 2025.1.31.
- 3) 朝日新聞, 「グラフでみる労働力人口、増えた産業は 女性正社員の割合は5割超」, 2025.1.31.
- 4) 観光経済新聞, 「「宿泊・飲食」は9万人増 12月の就業者数 総務省調査」, 2025.2.11.
- 5) 読売新聞, 「昨年12月の完全失業率2.4%、前月から0.1ポイント改善…総務省の労働力調査」, 2025.1.31.
- 6) 朝日新聞, 「就業者+求職者が最多 7000万人迫る 高齢者・女性が押し上げ、労働時間不足の試算も」, 2025.2.1.

일본 : 아마존 재팬 프리랜서 배송기사 산업재해 인정, 실질적 고용 문제 부각

2024년 3월,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아마존 재팬의 상품을 배송하던 49세 프리랜서 배송기사가 공동주택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 및 가슴 부위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2025년 2월 28일 미야자키 노동기준감독서는 해당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하고, 102일간의 휴업 보상 지급과 함께 산업재해로 판정했다. 이는 아마존 재팬의 프리랜서 배송기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 앞서 2023년 9월에는 카나가와 현 요코스카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유사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바 있다.¹⁾

해당 배송기사는 아마존 재팬이 아닌 하청업체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였다. 그러나 배송 업무 전반에서 아마존 재팬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송 경로와 근무시작 시각이 구체적으로 지정되고, GPS를 이용한 실시간 배송 상황 관리 등을 통해 업무 지

시와 통제가 이루어졌다. 미야자키 노동기준감독서는 이러한 근무환경이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²⁾

변호인 측은 프리랜서라도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통제가 있다면 실제 고용관계와 유사하므로,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정은 향후 프리랜서 배송기사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 역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도 근무 시간, 장소, 업무 방식 등이 발주처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된다면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전국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이와 관련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³⁾

한편 아마존 재팬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된 배송기사는 아마존 재팬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하청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⁴⁾

1) 共同通信, 「アマゾン配達員を労災認定 個人事業主、弁護士「2例目」, 2025.3.19.

2) 毎日新聞, 「アマゾン配達中に骨折、労災認定 全国2例目か、宮崎労基署」, 2025.3.19.

3) NHK, 「ネット通販 フリーランス配達員の配達中のけが 労災と認定」, 2025.3.19.

4) 朝日新聞, 「アマゾン配達員に労災認定 フリーランス、実態は雇用と判断」, 2025.3.19.